

##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대북정책 전망

김 국 신

통일연구원 · 동북아연구실장

이라크 반전 분위기가 크게 확산된 가운데 11월 7일 중간선거가 실시되어 하원의원 435명, 상원의원 33명, 주지사 36명을 새로 선출하였다. 개표 결과 민주당은 하원에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234석을 확보하고 28개 주지사를 장악한데 이어 상원에서도 사실상 다수당을 차지하는 압승을 기록하였다.

이번 중간선거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 선거에 패배한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가 위축되면서 대내외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사태에 대한 불만이 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민주당 주도 의회와 정책 조율을 하겠다는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북·미 양자협상을 거부하여 지난 6년 동안 북핵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해왔다. 내년 110대 의회가 개최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대북협상 추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엄격한 검증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강조하고 있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관한 민주당 주도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정책노선 위에서 보다 신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양자회담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북·미 접촉을 보다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북한의 협상행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다.

10월 17일 발효된 '2007년도 국방수권법'은 60일 이내에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대북정책조정관은 90일 이내에 대통령과 의회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용할만한 초당적 인물을 새로운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처럼 새로 임명될 대북정책조정관은 6자회담 당사국을 방문하고 북·미 양자 접촉을 모색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투영시킬 우리의 정책적 입장을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부시 행정부가 조기에 레임덕 현상에 빠질 것을 계산하여 대미 협상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